

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▣ 주요 내용

⌚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원자력) 미국 원자력 산업 부흥 및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1
-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'원전 르네상스'를 선언하고, 미국 원자력 산업 부흥 조치 발표

₩ 경제통상 동향

- (관세) 미 연방법원의 '트럼프 관세' 제동, 판결 하루만에 효력 중지 4
- (수출통제) 미국,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·화학물질 등 대중 수출 제한 5
- (경제) 미국 1분기 GDP 0.2% 감소…소비 둔화 및 수입 급증 영향 6

⚖️ 의회법안 동향

- 의회 특이 동향 없음(휴회기간) 6

💬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7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8

▣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5.30(금)	• 4월 개인소비지출(PCE index)
6.2(월)	• 5월 S&P 최종 미 생산 구매관리자지수(S&P final U.S. manufacturing PMI)
6.3(화)	• 5월 채용 정보(Job openings)
6.4(수)	• 5월 S&P 최종 미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(S&P final U.S. services PMI)

◎ 워싱턴 D.C. 포커스

(원자력) 미국 원자력 산업 부흥 및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

1. 개요

- 트럼프 대통령, 원자력 산업의 활성화와 전면적 혁신, 경제 성장 및 국가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 행정명령 발표(5.23)
 -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‘원전 르네상스’를 선언하고 포괄적 원자력 전략 기반 구축을 위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
 - (1)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(Reinvigorates the Nuclear Industrial Base)
 - (2) 에너지부 내 원자로 테스트 개혁 (Streamlines Nuclear Reactor Testing at the DOE)
 - (3) 원자력규제위원회(NRC) 개혁 (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)
 - (4)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 배치 (Deploys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)
 - △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4배(400GW)로 확대, △글로벌 원자력 기술 분야 미국의 리더십 회복, △국가 에너지 자립, 경제 성장 및 안보 이익 확보 등 미국 원전 산업 부흥을 위한 포괄적 원자력 전략의 실행 기반 마련이 목표

2. 행정명령 주요 내용

-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원자력·화석연료·신기술을 포함하는 에너지 독립 전략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, 무역 개선, 외교적 영향력 강화 도모 강조
 - (1)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(Reinvigorates the Nuclear Industrial Base)
 - (목표) 미국의 글로벌 산업, 디지털, 경제적 주도권 확보, 에너지 자립 달성 및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기술 에너지 생산 및 운영 촉진

- 에너지부 장관은 ① 핵연료폐기물 관리, 상업적 재활용 정책 및 핵폐기물 활용 방안에 대한 권고안 보고, ② 국내 우라늄 변환·농축 능력 확대 계획 수립, ③ 잉여 플루토늄을 첨단 원자로 연료로 전환 프로그램 추진, ④ 원자력 산업 컨소시엄 설립 지원 및 국내 연료 공급망 구축
- (주요 조치) △2030년까지 5GW 전력 공급 및 원자로 10기 신설 우선 추진
△원자력규제위원회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절차 개혁, △우라늄 채굴, 전환, 농축 및 재활용 능력 강화, △원자력 인력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, △폐쇄 발전소 재가동, 미완성 프로젝트 완료, 신규 원자로 건설 지원, △핵연료 관리 개선 및 핵물질 재활용·재처리 촉진 등

(2) 에너지부 내 원자로 테스트 개혁 (Streamlines Nuclear Reactor Testing at the DOE)

- (목표) 국립연구소 원자로 테스트 절차를 간소화하고, 원자로의 설계·건설·운영에 있어 에너지부 권한 강화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
- (주요 조치) 에너지부 장관은 △첨단 원자로 테스트 기준·절차 신속화 지침 마련, △첨단 원자로 심사·승인·배치 신속화를 위해 규정·지침·절차 개정, △에너지부 계약하에 외부 원자로 3기 시범 구축 추진(26년 7월 4일까지 임계 도달 목표), △환경 심사 등 내부 절차 간소화 또는 생략 등

(3) 원자력규제위원회(NRC) 개혁 (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)

- (목표) 외국 기술 의존도 축소, 규제 완화, 국내 원자력 산업 지원, 미국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NRC의 규제·조직·문화 전반 대대적 개혁을 지시
- (주요 조치) △NRC 규정·지침 전면 개정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, △원자로의 허가 기한(신규(18개월), 기존(12개월)) 도입, △과학 기반 방사선 기준 및 환경영화법(NEPA) 규정 개정, △국방부·에너지부의 안전성 검증 원자로 설계 신속 승인, △첨단 원자로 신속·대량 인허가 체계 구축, △NRC 조직·문화 개혁 및 경제·안보적 가치 평가 강화, △NRC의 인허가 신속 처리·혁신 기술 도입 촉진 등

(4)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 확대 (Deploys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)

- (목표) 국가안보 강화, 인공지능 인프라 전력 기반 구축, 민간 혁신 촉진 및 투자 유치, 글로벌 핵연료 공급망 강화로 군사력, AI, 에너지, 민간 혁신, 외교 등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 확보
- (주요 조치) △3년 내 미군 기지에 첨단 원자로 건설 및 가동, △ AI 데이터센터·국방시설 등 주요 인프라에 첨단 원자로 전력 공급(30개월 내 배치), △국방·에너지부 등 군 기지 내 원자로 운영을 위한 입법·규제 개선 권고, △민간 AI 원자로 프로젝트에 고농축 저농도 우라늄* 20톤 제공, △연방부지 내 민간 주도 핵연료 재활용·재처리·제조 설비 구축 지원 및 환경 규제 간소화 등

* HALEU(고농축 저농도 우라늄):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효율적인 차세대 원자로 연료로, 미국의 에너지·군사·AI 전략에서 핵심 자원으로 부상

□ 현지 반응

-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산업 부흥책에 대한 원자력 업계의 낙관론 및 정책 실현 가능성, 환경 영향·안정성에 대한 우려 혼재
-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행정명령을 '대규모 산업 부양책'이자 '규제 완화 정책'으로 평가하면서도, 실현 가능성과 안전·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보도
- 원자력 업계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산업 개혁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, 규제 확실성, 공급망 보안, 공공-민간 파트너십의 중요성 강조
- 원전 안전 옹호 단체들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독립성 약화 및 에너지부의 인력 감축이 원전 산업 발전과 공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- 애틀랜틱 카운슬,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찬 목표가 비용, 건설 지연, 차세대 원자로 설계 부족 등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회의적 시각 표명
- 기술 정보 혁신 재단(ITIF),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, 민간 자금 지원, 산업 전반의 포괄적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▪ 자료원	백악관 팩트시트(5.23 등), 애틀랜틱 카운슬(5.25), ITIF(5.27), 외 현지 언론 취합

(관세) 미 연방법원의 '트럼프 관세' 제동, 판결 하루만에 효력 중지

- (개요) 항소법원,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(5.29 16:00 기준)
 - 어제의 미 국제무역법원(CIT)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 일시 집행정지 결정
* 6월 5일까지 제소 기업의 의견 요청 및 6월 9일까지 법무부 소명 자료 제출 명령
- (경과) 연방법원 상호관세 무효 및 시행금지 평결(5.28) → 항소법원 일시복원 결정(5.29)
 - 미 국제무역법원(CIT)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법률상 수입 규제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, 해당 행정명령의 무효 판결(5.28)
* 미 행정부에 10일 이내 ▲대중국·캐나다·멕시코 관세, ▲10% 보편관세, ▲60여 개국 대상 상호관세 등 IEEPA 기반 관세 조치 등 철회를 위한 행정절차 개시를 명령

【미 국제무역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】

- IEEPA 제1702(b)(1)조는 대통령에게 수입규제(regulate importation)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, 본 법은 금융거래 제한 및 자산 동결 등 비상시 '거래금지'에 초점을 두고 있어, 관세 부과와 같은 일반적 통상 조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
- 해당 관세 조치가 구체적 사실 판단(tailored findings)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며, 이러한 포괄적 관세 부과는 선언된 국가비상사태와의 인과관계(nexus)가 불충분하다고 지적
- 해당 관세 조치들이 IEEPA에 근거한 초과 권한 행사(ultra vires)로 무효이며, 이로 인해 납부된 관세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환급될 수 있다고 명시

- 행정부가 판결에 불복하여 긴급 제출한 효력 정지 요청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여 관세 철회 즉각 이행에서 유예되었으며, 판결 전까지 관세 징수 유지 가능(5.29)

- (반응) 연방법원, 별도 기소건에 대해 유사 평결, 그러나 품목별 관세는 유지 전망
 - D.C. 연방법원 콘트레拉斯 판사는 일리노이주 소재 장난감 수입업체의 유사 기소건에 대해 IEEPA가 해당 기업에게서 관세를 징수할 권리가 없다고 평결(5.29)
 -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통상법 제301조 기반 철강·알루미늄·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본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될 예정
 -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(NEC) 케빈 해셋 위원장은 "해당 관세는 미국 제조업 재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, 법원 판결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" 입장 표명

- | | |
|-------|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 D.C. 무역관 정연호 |
| ▪ 자료원 | 미 국제무역법원(5.28), 폴리티코(5.28), 블룸버그(5.29) |

(수출통제) 미국,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·화학물질 등 대중 수출 제한

- (개요) 미국, 전략적 품목 중심 규제 조치 시행으로 대중 수출 규제 강화

-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에 대해 라이선스 없이 대중 수출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며, 일부 공급업체 기준 수출 라이선스 또한 취소
- 로이터 통신은 본 조치는 중국의 핵심 산업 필수 제품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 공급망 주요 거점 차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
- 상무부는 대중 수출 허가 요청에 대해 진별 심사를 진행 예정이며, 본 조치가 전면적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언론에서는 시사

- (상세)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확대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 전망

- 본 조치 영향 대상에는 반도체용 설계 소프트웨어, 관련 화학물질, 부탄 및 에탄 등 가스류, 공작 기계, 항공 장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
- 반도체용 전자설계자동화(EDA)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일부 기업*은 중국에 제품 공급을 위해 향후 별도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지서 수령(5.23)
* 케이던스(Cadence), 시냅시스(Synopsys), 지멘스(Siemens) 자회사 지멘스 EDA 등이 포함
-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은 미국산 전자설계자동화(EDA)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* 있기에, 접근 제한 시 중국 반도체 산업** 전반에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언론에서 분석
* 케이던스, 시냅시스, 지멘스 자회사 멘토 그래픽스(Mentor Graphics)가 중국 시장의 70% 이상 점유
** 케이던스와 시냅시스 소프트웨어 사용 중인 중국 기업으로는 브라이트 세미컨덕터(Brite Semiconductor), 지에리 반도체(Zhuhai Jiehi), 베리실리콘(VeriSilicon) 등이 존재
- 중국 외교부는 본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, 워싱턴이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중국을 배제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김경현
▪ 자료원	로이터(5.29)

(경제) 미국 1분기 GDP 0.2% 감소…소비 둔화 및 수입 급증 영향

- (개요) 2025년 1분기 미국 실질 GDP가 전기 대비 연율 -0.2%로 집계(잠정치), 2022년 이후 첫 분기 마이너스 성장 기록
 - GDP 감소는 소비 증가세 둔화(1.2%, 최근 2년 내 최저)와 트럼프발 관세에 따른 수입 급증(42.6%↑, GDP에서 약 5%p 차감)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
 - * 서비스 소비(의료·주택 등)는 1.1%p 기여했으나 내구재(자동차 등)는 0.11%p로 급감
 - 특히,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기업들이 조기 수입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
- (상세) 현지, 수입 급증과 소비 둔화가 성장률 하락 원인, 2분기에는 반등 기대감
 - 기업 설비투자(10.3%↑)와 재고 증가, 수출 확대 등이 일부 하락폭을 상쇄했으나 정부 지출도 4.6% 감소해 성장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 분석
 - 최종 민간수요(소비 및 고정투자)는 2.5% 증가했으나, 직전 분기(2.4%↑)에 비해 둔화
 - 현지 언론은 백악관은 일부 관세 유예·완화로 경기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, 시장에서는 소비·투자 흐름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보도
 -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·재정정책, 소비 회복 여부가 향후 성장 모멘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2분기에는 재고 조정 효과나 투자 확대 등 반등 기대감 관심
 - * 3월 개인소비지출(PCE) 0.7% 증가, 완만한 회복 조짐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김준희
■ 자료원	블룸버그(5.29)

▣ 의회법안 동향

* 특이 동향 없음(휴회기간)

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Trump Administration Races to Stop Bombshell Tariff Ruling (트럼프 행정부, “관세 부과 위법 판정” 번복에 총력)</p> <p>지난 수요일, 연방통상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 하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10일 내 기존 행정명령 취소 명령을 내리라 평결.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및 긴급 집행정지 신청</p>
The Washington Post	<p>Trump meets with Fed chief for first time since recent criticism (트럼프, 최근 비판 후 처음으로 연준 의장과 만나...)</p> <p>트럼프와 파월 의장 간 1대1 만남은 이번 임기 시작 후 처음. 연준은 성명문에서 오직 경제지표만으로 향후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 밝혀. 백악관은 금리유지가 실책이라는 생각에 변함없다고 밝혀</p>
The New York Times	<p>With Tariffs in Limbo, U.S. Trading Partners React Cautiously (갈팡지팡 관세정책, 조심스러운 교역국가들)</p> <p>미국의 주요 교역 국가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. 행정부가 다른 수단으로 관세 부과할 가능성도 있으며, 철강 알루미늄 등 산업 특정 관세는 효력이 없기 때문</p>
CNN	<p>Stocks waver after a federal court halted Trump's tariffs (법원의 트럼프 관세 제동에... 요동치는 미 증시)</p> <p>엔비디아의 실적발표와 관세부과 정지 명령에 힘입어 증시 초반엔 상승했으나 백악관의 즉각 항소 등으로 무역전쟁의 향방이 미궁에 빠지자 하락세로 반전</p>
USA Today	<p>Second federal court blocks Trump tariffs, this time for Illinois toy importers (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 제동 두 번째 평결 사례)</p> <p>루돌프 콘트레拉斯 판사는 5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고인 일리노이 기업들에게서 관세 징수 중지를 명령</p>

* 미국 동부 시간 5월 29일 15시 기준

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경제통상리포트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5-14	약가 인하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5월
US25-13	美 정기선 해운산업의 경제적 영향 및 항만료 추정 비용 분석 주요 내용	2025.05월
US25-12	2026 회계연도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5월
US25-11	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4월
US25-10	美 USTR의 중국 조선업 무역법 301조 권고 조치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04월
US25-09	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(NTE Report) 주요 내용	2025.04월
US25-08	'미국 우선 투자 정책' 대통령 각서 발표 및 주요 내용	2025.04월
US25-07	미일 정상회담,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동맹 강화	2025.02월
US25-06	美 캐나다·멕시코·중국 관세부과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2월
US25-05	美 하원에 발의된 '미국 상호무역법안' 상세 내용 및 시사점	2025.02월
US25-04	미 하원, 공정 무역 회복법(Restoring Trade Fairness Act) 발의	2025.02월
US25-03	'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 리더십 강화'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2월
US25-02	2025년 글로벌 경제·통상 정책 전환과 주요 일정	2025.02월
US25-01	美 신정부 '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' 대통령 조치 분석 및 시사점	2025.01월
US24-47	유엔 무역개발회의(UNCTAD) 글로벌 무역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	2024.12월
US24-46	미 2050 원자력 3배 확대 로드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4.12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사-22 (2025.5.13.)	 미국 통상 전문가가 예측한 트럼프 2기 글로벌 경제	
코인사-21 (2025.2.8.)	 워싱턴 특파원이 알려주는 미국 경제 통상 핵심 키워드	

문의	이메일	전화
	seogil.chang@kotra.or.kr	+1) 202-857-7919
	jwshim@kotra.or.kr	